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관 **연** **○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의견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4조의2 삭제** <2008.3.21.>

관 **연** **○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전문개정 2008.3.21.]**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관 **연** **○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관 **연** **○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관 **연** **○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관 **연** **○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2. 피해의 원상회복
 -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1. 시정명령의 이유
 - 2. 시정명령의 내용
 - 3. 시정기한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1.]

관 연 규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관 연 규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본조신설 2008.3.21.]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규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2010.2.4., 2010.6.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관 연**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 <개정 2010.6.4.>
-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
 -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 [전문개정 2008.3.21.]

- 관 연**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개정 2010.6.4.>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 [전문개정 2008.3.21.]

- 관 연**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
 -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 관 연**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관 연**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 규**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④ 삭제 <2010.2.4.>
- [전문개정 2008.3.21.]
- [제목개정 2010.2.4.]

- 관 연**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
-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관 연**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취업알선 업무를 하는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관 **연**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시행일:2017.1.1.]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 **연** **○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0.2.4.]

관 **연** **○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10.2.4.]

관 **연** **○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관 **연** **○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관 **연** **○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전문개정 2008.3.21.]

관 **○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 관**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3.21.]

- 관** **연**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3.21.]

관 **부 칙** <법을 제4487호, 1991.12.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부 칙** <법을 제4733호, 1994.1.7.> (**부칙(접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을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관 **부 칙** <법을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 **부 칙** <법을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접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관 **부 칙** <법을 제5882호, 1999.2.8.> (**직업훈련촉진기금법**) (**부칙(접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관 **부 칙** <법을 제6849호, 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부 칙** <법을 제8116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부 칙** <법을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부칙(접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 ☐ 부 칙 <법을 제8472호, 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법을 제8962호, 2008.3.21.> [부칙 \(접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 ☐ 부 칙 <법을 제9792호, 2009.10.9.>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 부 칙 <법을 제9997호, 2010.2.4.> [부칙 \(접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 칙 <법을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의 부분·제6호·제2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제1호·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4호·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 부 칙 <법을 제11791호, 2013.5.22.> [부칙 \(접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 ☐ 부 칙 <법을 제13897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